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3292
----------	-------

발의연월일 : 2025. 9. 25.

발 의 자 : 이재강 · 전종덕 · 박민규
윤종오 · 김우영 · 이성윤
김준형 · 정춘생 · 김 윤
정혜경 · 허성무 · 이주희
진성준 · 김동아 · 권향엽
이용우 · 서미화 · 오기형
장종태 · 박정현 · 황정아
이훈기 · 임미애 · 이병진
백승아 · 조계원 · 김남희
오세희 · 김현정 · 송재봉
손명수 · 이기현 · 이건태
안태준 · 이상식 · 문금주
박해철 · 정진욱 · 황명선
이재관 · 김용만 · 서왕진
한창민 · 용혜인 · 박은정
손 솔 · 신장식 · 최혁진
김태선 · 박용갑 · 이연희
박선원 · 문대림 · 김기표
김남근 · 위성곤 · 곽상언
이광희 · 김문수 · 정일영
민형배 · 김준혁 · 이용선
전현희 · 백선희

의원(65인)

주 문

1.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미국 정부는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향후에도 국민경제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협하는 불공정한 대외 요구나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사회 및 경제계와 함께 투명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간 상호신뢰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하여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결코 일방적 강요를 받아야 할 관계가 아니다. 미국의 요구는 양국 간 동등한 파트너십을 무시한 처사로,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 투자 강요, 무역 제한 등 일방적 경제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 질서를 흔들고 동맹국들조차 불안정하게 만들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피해를 보고 있어,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대한민국 정부는 “동맹은 존중하되 불합리한 일방주의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 또한 단순한 인권 침해 사건을 넘어, 미국의 일방주의가 불러온 폐해라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근무하던 한국 노동자들이 이유 없이 구금되고 인권을 침해당한 것은, 동맹국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미국의 일방적 정책 운용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불안과 분노를 안겼다. 동맹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 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는 현실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나아가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과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낳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진정한 상호존중 위에 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한미동맹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

리는 지금까지의 동맹관계를 존중하며, 앞으로도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질서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 역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정되고 성숙해져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원칙 아래, 진정한 상호존중과 균형에 기초한 동맹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합리한 3,500억 달러 투자 요구 철회 △조지아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양국 관계가 진정으로 상호 호혜적이고 존중받는 동맹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